



소비자물가 '천정부지'...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광주·전남 전년 동월비 6.6%·7.3% ↑...외식·농축산물 ↑

전월비 증가폭은 다소 둔화...“불안요소 완화 조짐도”

●호남동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천정부지'다.

7월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기록했다. 다만 국제곡물·유가 하락 등

의 전망에 추후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6%, 7.3% 증가했다. 양 지역 모두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관련기사 3·13면

반면, 전월 대비 증가폭은 다소 둔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월 0.5%에서 5월 1.0%까지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0.5%로 줄었다. 전남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 6월 상승폭 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도 소비자물가와 동일하게 1998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했다.

전월 대비 상추, 시금치 가격이 각각 88.9%, 43.8% 치솟는 등 농산물 가격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시가스(6.5%) 등의 증가가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

전남도 같은 기간 생활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0% 늘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광주에서 전월 대비 4.7%, 전년 동월 대비 13.3% 각각 늘었다.

신선어패류(5.6%), 신선채소류(18.8%), 신선과실류(14.7%)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이 중 신선과실류와 채소류는 전월 대비로만 4.0·

10.1% 각각 폭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채소류에서 배추(65.4%), 오이(72.4%), 호박(69.6%) 등이, 과실류에선 포도(51.1%), 체리(75.8%), 키위(25.6%) 등 대부분 품목이 크게 늘었다.

전남 또한 같은 기간 신선식품지수가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

올해 초부터 극심한 폭 가뭄이 길게 이어진 데다 일찍 시작된 폭염, 장마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이 작황 부진을 겪고 이와 함께 유통·비리비 상승에 생산 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

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됐지만 농산물과 함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휴가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 항공료 등 서비스 부문과 공공요금 영향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산물(9.2%), 공업제품(9.1%), 전기·가스·수도(15.6%)가 상승해 상승률이 9.5%, 집세(1.1%), 공공서비스(0.6%), 개인서비스(5.6%) 등 증가에 서비스가 3.8% 늘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30년 숙원' 전남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전남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전남도내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남도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4면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같은 날 의대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남은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인명사호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 인력과 낙후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은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 및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인 셈이다.

특별법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지사 소속의 '전

동·서부 권역별 분원 캠퍼스·공동교육과정 설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로 상생 패러다임 제시 소병철 "도내 지역·정파 역량 집중 반드시 실현"

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컨트론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전남지사를 포함해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도 고려하도록 해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지역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전남지역 의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했고, 전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 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과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 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

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 의료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 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Today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훈선'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갈...지리산	14면
KIA 이창진 '7월 MVP' 경쟁	16면



쌓여가는 검체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유행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받은 PCR 검체통이 쌓여가고 있다. /김애리기자

코로나 이르면 이달 중순 정점 전망

광주·전남 확진 7천명 육박

광주·전남에서 하루 신규 확진 7천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재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당초 8월 말께로 예상됐던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이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상되는 정점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순이다.

이 같은 예상은 켄타로우스 변이(B A.2.75)의 영향이 당초 예측치보다 크지 않고 감염재생산지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해위를 다녀온 3명이 켄타로우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국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감염재생산지수의 경우 광주·전남 모두 지난 일주일 사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 광주지역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25일 1.27에서 8월 1일 1.17로, 전남은 7월 25일 1.56에서 8월 1일 1.37로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3천540명, 전남 2천 876명 등 6천416명으로 집계됐다. 자정 집계분까지 더해지면 7천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광주 2천649명, 전남 3천131명 등 5천780명이 확진돼 6일 만에 5천명대로 재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과 하룻 만에 6천명선까지 뚫린 셈이다. /김재정기자